



류 종 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jh@rig.re.kr

강원도 재난안전 종합계획 정책방향

I. 강원도 재난안전 진단과 특성

강원도는 한반도 중앙부의 동측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동쪽을 영동지방, 서쪽을 영서지방으로 나누고 있다. 영동지방은 경사가 급하며 산지와 해안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서지방은 경사가 완만하고 남·북한강이 있어 대하천이 발달하였으며 산지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 강원도의 지세는 100m 이하의 저지대가 강원도 총면적의 5.6%를 차지하며, 100m~500m의 저산야지대가 43.2%, 500m~1,000m의 중산야지대가 43.5%, 1,000m이상의 고산지대도 무려 7.7%가 형성되어 있다. 즉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 것이다.

영동지방은 산맥의 급한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 바다로 연결되어 있어 해양성기후에 가까운 기상 특성을 보이는 반면, 영서지방은 한반도의 중앙내륙에 위치해 있어 대륙성기후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산맥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한 산악지방은 산악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기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영동지방은 산맥의 급경사면이 바다와 접해있어 평야 지역은 거의 없으며, 해안선을 따라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에 따라 영동지방은 위도에 비하여 겨울철에 온난하고 여름철은 비교적 시원한 편이어서 연 기온의 교차가 적은 편에 속한다. 또한 영동지방이 영서지방보다 기온이 2℃가량 높은 분포를 나타내며, 강수량은 영동지방이 2,058mm, 영서지방은 1,690mm로 영동지방이 영서지방보다 약 370mm 많은 편이다. 또한 겨울철과 봄철에 강풍 현상이 자주 있으며, 평균 풍속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한 편이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데, 특히 영서지방이나 서해안 지방보다 1, 2월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북동기류 유입 시 대설이 발생한다. 강원도는 동해를 중심으로 일본열도와 근접하기 때문에 일본열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에도 영향을 받으며 실제 지진해일(쓰나미)의 피해발생사례가 있다.

기후변화와 세계화, 노후건물 증가, 고령화, 산업화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점차 다양한 형태의 재난안전 환경 변화 또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를 살펴보면 해마다 빠르게 기온 및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뭄, 집중호우, 해일, 폭설 등의 자연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기온은 3.0~5.9℃ 상승(전 지구는 1.8~3.7℃ 상승)하고 있다. 시설물의 노후화와 고령화, 대형화로 인한 붕괴위험요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50년 이상 노후시설 다수(교량 27%, 터널 30%, 옹벽 37%, 승강장 17%) 존재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재난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09년), 구제역('10년), 에볼라('14년), 메르스('15년)의 발생 사례가 그 예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14년 12% → '50년 37%)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인 고령화로 인해 안전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전기, 가스)시설의 밀집에 따른 복합재난 및 산업화에 따른 특수재난(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정전)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재난안전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2005~2014)간 강원도 재난재해 실태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연재난 피해액은 전국 자연재난 평균의 4.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재해재난 총 피해액은 6조 9,44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27.7%인 1조 9,2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의 지형 특성상 자연재난 피해액이 다른 지역들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06년의 강원도 인제·홍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로 1조 6천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피해를 입었다. 최근 10년간 시설별 피해액을 보면 공공시설(84.8%), 농경지(8.5%), 건물(1.2%)순이었으며, 자연재난의 경우 강원도는 호우(94.6%), 대설(3.7%), 태풍(1.2%) 순이었으며, 전국은 호우(58.4%), 태풍(27.4%), 대설(12.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복구비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호우(96.9%), 대설(1.7%), 태풍(91.2%)인 반면 전국은 호우(65.2%), 태풍(26.9%), 대설(7.2%) 순으로 호우에 의한 복구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시군구별 우심피해 발생률을 살펴보면 삼척시가 6건으로 가장 많은 우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에서 5건의 우심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평창군이 피해액의 3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제군이 2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우심피해는 총 487건이었는데 이중 강원도의 우심피해는 63건으로 우심발생량의 1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심피해의 평균 피해액은 13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강원도내 평균 우심피해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우심피해 발생 피해액에서 평창군(33.1%), 인제군(27.6%)이 6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의 재난은 산불, 산업안전, 도로교통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5년('08~'12년)간 강원도 재난은 산불(자연재난), 산업안전(사회재난), 도로교통(생활안전) 부문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자연재난 산불(88%), 호우(6%), 강풍(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은 산업안전(41.37%), 2군 감염병(29.26%), 화재(26.22%) 순이며 생활안전 분야는 도로교통(94.65%), 등산(3.05%), 해양(1.11%), 익사(0.81%)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재난은 전국대비 발생건수의 4.5% 수준이었으며 피해액은 3.3% 수준이었다. 그 중 자연재난이 22.3%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고 사회재난은 4.8%,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3.9%를 각각 점유하고 있었다. 전국은 도로교통(51.2%), 산업안전(21.1%), 감염병(11.8%), 화재(9.9%) 순이며 강원도는 도로교통(47.7%), 산업안전(19.8%), 감염병(15.3%), 화재(12.8%) 순이었다.

II. 강원도 재난안전 설문조사 분석과 시사점

강원도와 18개 시·군 재난안전 관련 정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강원도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수준, 재난유형별 안전 중요도와 전망, 안전 필요 사항, 제약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강원도 재난안전 관련 설문조사는 안전관련 담당자들이 강원도 안전에 관하여 느끼는 안전 관리수준, 안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여 강원도의 안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다음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강원발전연구원, 2015. 10)하여 도출해낸 결과이다.

강원도와 시군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재난안전 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균 보통 이상인 3.42 수준으로 양호했으며, 4대악이 3.28, 사회재난 3.49, 자연재난 3.39, 생활안전 3.5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4대악이 가장 불안정한 수준이며 생활안전이 가장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강원도와 시군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대처 능력은 평균 보통 이상인 3.49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4대악 3.27, 사회재난 3.43, 자연재난 3.69, 생활안전 3.59 수준이었다. 이처럼 자연재난 대처 능력이 타 재난에 비해 다소 우수하지만 4대악의 경우 대처능력이 보통이하의 미흡한 상태이므로 4대악과 관련된 성·가정·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음란물, 자살 등의 사회재난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강원도와 시군의 재난안전 분야 주요 문제점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의 미정착'이라는 점이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미약 10.7%, 현장의 재난 대응 제도 및 역량 미흡 9.3%, 생활 속 안전문화 미정착 46.3%, 재난안전 인프라 취약 14.6%, 재난안전 관련 사업이 중앙 정책사업, 시설물 중심(구조적 대책)에 미흡 16.1%, 기타 2.9%로 조사되었다.

향후 10년 내 각종 재난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강원도와 시군에서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의 재난안전 위험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27.8%)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33.3%)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 중점 대처 분야는 풍수해, 산불, 설해, 감염병, 치안, 교통안전 등인데 자연재난에서

의 중점대처 분야로는 풍수해와 산불, 설해 분야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1순위로 대처해야 할 분야는 산불(37.0%), 풍수해(33.3%), 폭염(11.1%), 설해(8.5%)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의 경우 설해(23.9%), 풍수해(22.1%), 산불(22.1%)의 순이었으며 3순위의 경우 풍수해(20.2%), 설해(19.7%), 산불(18.1%)의 순이었다. 사회재난 분야 중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분야는 감염병, 수질오염, 식품분야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았다. 1순위 분야는 감염병(29.6%), 식품(19.0%), 화재(17.5%), 수질오염(12.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순위의 경우 화재(21.2%), 수질오염(19.0%), 감염병(17.5%)의 순이었다. 3순위의 경우 수질오염(18.6%), 식품(16.0%), 산불(18.1%)의 순이었다. 생활안전 분야 중 중점 대처해야 할 분야는 교통안전, 학교안전, 치안분야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았다. 1순위로 대처해야 할 분야는 치안(28.6%), 교통안전(28.0%), 학교안전(20.6%)의 순이고 2순위의 경우 화재(21.2%), 수질오염(19.0%), 감염병(17.5%)의 순이었다. 3순위의 경우 수질오염(18.6%), 식품(16.0%), 산불(18.1%)의 순이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안전종합대책 계획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정책으로 우선 추진해야 하는 1순위로 올림픽안전종합대책(54.8%), 올림픽경기장 안전관리(19.4%)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순위는 올림픽경기장 안전관리(39.8%), 치안대책(14.0%), 생활쓰레기처리(11.8%)의 순이고 3순위는 감염병 등 의료대책(19.4%), 제설대책(10.9%), 치안대책(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시군이 재난안전정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 1순위에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37.1%)이 선정되었다. 2순위는 안전취약 해소 등 안전복지 강화, 3순위는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취약 해소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시군의 재난안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실적 제약에 대하여 예산·인력, 안전문화, 조직, 기타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추진 예산부족, 재난안전 전문인력 부족, 기피부서 인식으로 인력의 정예화와 노하우 축적 곤란 등이 있었다. 또한 시·군 조직 미약으로 인한 업무폭증, 시설담당부서와 재난관리부서 간 업무 비협조와 컨트롤 타워의 권한 부족, 중앙부처에 의한 수동적 정책 수행, 기관 간 협력부족(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간 협력부족)과 도·시군 실정에 맞는 정책 부재, 기반시설 인프라 취약, 재난분야 민간네트워크 조직 협소, 실전연습 부족, 중앙 정책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율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강원도 재난안전의 문제점으로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미약,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 및 표준 미흡, 생활 속 안전문화 미정착, 재난안전 인프라 취약 등이 있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 따라 강원도 맞춤형 재난안전 종합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재난안전 관련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재난안전 주요 시책과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또한 주요 사업은 재난안전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 대책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고 재난 안전을 위한

분야·부서·기관이 각자 산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 사업들 간 연계와 협력, 패키지화 등 공조 및 협력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Ⅲ. 강원도 지역안전지수 수준

지역안전지수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8(안전지수의 공표)에 근거하여 「국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안전처가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14년 기준)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 위해지표 및 상호 인과관계가 입증된 35개 핵심지표를 사용하여 7개 분야(① 화재, ② 교통사고, ③ 자연재해, ④ 범죄, ⑤ 안전사고, ⑥ 자살, ⑦ 감염병) 안전지수 산출, 위해지표(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 산출식에 근거하여 계산한 지수로 최고 1에서 최저 5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 발표 자료(국민안전처, 2015. 11. 04)에 의하면 강원도 지역안전지수는 7개 부문 모든 분야에서 3등급 이하 보통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와 범죄, 안전사고는 4등급, 자살의 경우 최저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수도권 및 경기도는 화재와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 서울시는 화재와 교통사고 등 2개 분야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도내에서는 화천군이 교통사고와 자살, 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평가 받아 도내 최고 등급 지역으로 평가되었고 삼척시와 양양군이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이(각 3개씩) 5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과 강릉, 횡성은 1등급 또는 2등급을 어느 분야에서도 받지 못하였으나 정선과 양구, 고성은 화재 분야에서 속초는 자연재해에서 각각 1등급 평가를 받았다.

■ 강원도 7개 분야 안전 수준 평가 결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화재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영월군 인제군	원주시 평창군 철원군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삼척시 양양군	'14년 통계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교 통	화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인제군	삼척시		'14년 통계기준
자연 재해	속초시	원주시 삼척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횡성군	강릉시 영월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춘천시 철원군	
범죄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원주시 속초시 양양군	
안전 사고		철원군 양구군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인제군 양양군	
자살	화천군 양구군	태백시	원주시 홍천군 영월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횡성군 평창군 인제군	강원도 삼척시 정선군	
감염병	화천군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자료 : 국민안전체(2015. 11. 4) 보도자료 참조 재작성

안전지수가 5등급에 가까울수록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안전수준 또한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약 부문에 대한 대책과 개선을 위한 안전수준 제고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각 분야별 4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시군을 살펴보면 먼저, 화재분야에서는 삼척시와 양양군이 5등급 평가를 받았고 춘천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이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춘천시·철원군이 5등급을, 강릉시·영월군·화천군·양구군·양양군이 4등급을 받았다. 범죄분야에서는 원주시·속초시 양양군이 5등급, 춘천시·강릉시·동해시·홍천군·평창군·정선군이 4등급을 받았다.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태백시·삼척시·평창군·인제군·양양군이 5등급을 받고 강릉시·동해시·속초시·영월군이 4등급을 받았다. 자살분야에서는 삼척시·정선군이 5등급, 춘천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횡성군·평창군·인제군이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강원도 재난안전관리 정책방향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최근 재난환경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이 상존하고 시설 노후화·인구 고령화 등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세계화·도시화·기술화 등으로 신종재난 증가와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 등 최근 재난안전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최근 10년(2005~2014)간 강원도 재난재해 피해액은 1조 9,255억 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4.5배, 전국 대비 28% 수준이다. 강원도 지역안전지수는 7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화재와 범죄, 안전사고, 자살부문에서는 최저 수준의 안전 등급을 부여받았다. 또한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재난 유형을 보면 산불 88%(자연재난), 산업안전 41%(사회재난), 도로교통 95%(생활안전)를 차지하여 이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강원도 재난안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 속 안전문화 미정착'(46.3%)이 재난발생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재난안전 중점 대처 분야로는 사회재난은 감염병, 재난안전은 풍수해·산불·설해, 생활안전은 교통·학교·치안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안전을 강조하여 제도 개선, 점검 강화, 인프라 보강, 교육확대 등 4대 분야 8대 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정부의 방향을 고려하고 도 내의 재난환경을 반영한 재난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사회적 이슈 혹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획일적인 비전을 수립하거나 단기적 목표만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 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은 강원도 내 재난발생추이 분석·저감을 설정 및 재난관리 체계의 효율화 증진을 위한 업무 방향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이 각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전으로는 365 안심·안전공동체, 행복한 강원도 실현이 제시되고 있으며 3대 목표로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 실현, 안전이 체질화되고 생활화 된 도민, 안전이 우선하는 지역사회문화 정착이 제안되고 있다.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인프라 확충,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안전취약요소 해소 등 안전복지 강화, 안심·안전 올림픽 준비 및 관리 대책 마련, 재난안전 대응 역량체계 구축과 같은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재난안전 관리가 사후 복구중심에서 재난예방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강원도 또한 예방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구축 및 운영 관리, 시군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재난취약지역 스마트 예·경보 구축, 재해취약지구와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사전재해예방 도시계획 수립, 재난관리 사각지대 매뉴얼 작성 관리, 강원도 재난안전 지표관리 및 재난안전 지도 제작과 강원창조경제센터와 연계하여 재난안전 Big Data 구축, 이 밖에 강원도 재난안전 백서, 강원도 재난안전연보 발간 등이 있다.

둘째, 도민생활에서의 안전문화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 재난안전 분야 설문조사(강원발전연구원, 2015. 10)에서 강원도의 재난안전 주요 문제점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미정착(46.3%)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안전 뿌리내리기를 위한 체계적·전략적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13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적 안전문화운동 강원도 추진협의회의 활성화, 학교안전네트워크 강화, 강원도 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축과 안전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대응,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과 취약시기 특별소방대책, 생애주기별 안전문화교육의 체계적 추진과 확대, 그리고 강원도 안전신문고 설치 운영,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생활안전 길라잡이 발간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강원도 안전지수 향상 종합대책과 컨설팅 추진이 필요하다.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

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7대 분야 중 자살(5등급), 화재·범죄·안전사고(4등급) 등 취약부문 안전지수 향상 종합대책과 컨설팅을 추진한다.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범도민적인 안전지수 향상 종합대책 마련과 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자살분야와 화재·범죄·안전사고분야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안전인프라 확충과 안전 분야 재원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요소 해소 등 안전복지 차원의 추진 과제로는 생활안전지도 작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티드) 적용 관리, 강원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새뜰사업(지역발전위원회)·안전마을(국민안전처) 사업을 통한 취약지구 안전 정비, 농어촌 안전 및 소방사각지대 점검 등이 있다. 이 밖에 접경지역 탄약저장고 등 군사위험시설 안전관리,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생활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훈련, 안전시설 개선, 의료사각지대 응급체계 및 원격의료 접근성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 조사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 재난안전정책으로 우선 추진해야 하는 대책으로는 올림픽 안전종합 대책, 올림픽경기장 안전관리, 전염병 예방 분야로써 이 부분에서 중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올림픽안전 종합대책 분야는 대회기간 동안 대테러, 재난재해, 치안, 제설, 위생업소 관리, 생활쓰레기 처리 등이 있다. 이외에 올림픽 응급의료 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올림픽 재난안전 예방·대응 활동 추진, 올림픽 개폐식장 주변 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로 재해위험요인 사전 해소 또한 과제이다.

여섯째, 민관 합동으로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발생 대비 예방점검 및 조기에보시스템 구축과 재난안전진단, 산사태, 화재 등 재해·재난 우려지역은 전문가와 ‘민관합동예방점검단을 편성하여 정례적, 계절적 예방 점검(년 2회 이상) 실시와 재난재해 유형별 관련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사고 초기 시 동반 투입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강원도 재난안전실의 가뭄 및 기상재해 등 유형별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예방-대비-대응-사후복구’와 같은 통합 재난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일곱째, 분산되어 있는 강원도 재난안전 조례의 통합적 운영이 과제이다. 현재 강원도 재난안전 분야의 조례는 12개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다. 타 시도에 비해 앞서가는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된 강원도 재난안전 분야 조례의 종합적·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강원도 재난안전실 출범을 계기로 재난안전 정책기능 조정 및 지원 강화가 촉구된다. 조례 주요 내용(안)에는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강원도 재난안전상황실, 강원도 안전관리자문단, 재난예방 및 대비, 재난대응 및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계획 등(강원도 중장기 재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등)과 안전문화 활동 육성 지원, 안전교육,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 자원봉사자, 지역재난 피해 지원, 재난 취약계층 지원, 재난안전 재원 등이 담겨져

야 한다.

끝으로 강원도 중장기 재난안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강원도의 재난안전 정책은 전반적으로 중앙정책과 시설물 중심대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특성이 반영된 안전정책 수립 및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재난안전 종합계획 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 강원도와 시·군 안전관리계획의 분야별 목표 및 방향 지침의 제시와 강원도 특화형 안전정책 수립 및 전략 프로젝트 정책사업 발굴 등을 비롯하여 재난안전 전문인력 육성, 재난안전 투자(예산), 재난안전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확대 정책 등의 과제 수행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2015. 8)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자료집
- 강원도청(2015)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 강원발전연구원(2015. 10), 강원안전포럼 자료집
- 강원발전연구원(2015. 12), 강원도 재난안전 강화방안
- 국민안전처(2015. 3) 안전혁신마스터플랜
- 국민안전처(2015),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류중현(2015.11), “효율적인 강원도 재난안전 역량 강화 정책방향”, 정책메모 제512호, 강원발전연구원